

검찰, 라임·옵티머스 수사 본격화

靑 CCTV 공개 요구...문대통령 "적극 협조하라" 첫 언급 시민단체 "靑·與 연루 의혹 조사 필요...성역 없는 수사"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윤모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14일 별건의 뒷돈 수수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이들 사건의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윤 전 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5-1부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옵티머스 관련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윤 전 국장은 특별대출을 앞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

추 주는 대가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로부터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앞선수제)를 받고 있다.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건 관련해 잇따라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사회단체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펀드 사기 수사를 무마하고자 여권과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거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

혹이 제기된 만큼, 내부 문건의 진위나 실행 여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구속된 옵티머스 이사의 배우자이자 올해 6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모 변호사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선거사무소 복합기 대여 비용을 옵티머스가 대납했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김봉현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을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로비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 역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

에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는 전날 한 언론 보도를 보고받은 뒤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와대는 검찰의 이러한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언론에 거론되는 이모 전 민정비서관 실행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亞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조속 처리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형배, 이용빈, 이형석, 이병훈, 양향자, 조오섭, 윤영덕 의원. /연합뉴스

김종인, 내년 재보선 겨냥 ‘호남 끌어안기’

국민통합위 ‘비례대표 25% 호남 배정’ 의결 “서울·부산 시장선거서 국민통합 문제 중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민 통합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호남 민심’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 첫 회의에서 “서울시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호남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70년대 김대중 박정희 두 후보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호남이 하나의 이단적 지역처럼 분열돼 (보수정당이)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40여년

동안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는 내게 자신들의 한(恨)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으로 변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만 진실하게 국민통합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유력권인 20위 이내에서 4분의 1을 호남지역 인사로 우선 추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추천제도는 의원 총회와 비대위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도 설명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말 호남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김종인 위원장도 전북, 광주, 전남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자체 자매결연-예산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정 위원장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상설위원회로 국민통합위를 설치하고 ‘호남 동행 국회의원발대식’을 여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힘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묘역을 찾아 화하고 사죄의 뜻으로 무릎을 꿇기도 했다.

보수정당 대표가 5·18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처음이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亞문화도시특별법 조기 처리” 광주 국회의원들, 촉구 성명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14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회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송갑석·양향자·윤영덕·이형석·조오섭·이용빈·민형배 등 의원 8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아시아 문화전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 당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갈리면서 조직, 사업 방향이 바뀌어왔다”며 “문화전당, 문화중심 도시 특별법을 정쟁 도구화하지 말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이번 회기에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문화전당 운영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책 사업 위상은 위협받고 국가 균형 발전, 아시아 국가 간 유대 협력 등 사업 추진도 곤란해진다”고 우려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60세 이상 여성 37%, 갱년기 질환 치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갱년기에 의한 병원 진료를 받는 여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0년 8월 우리나라 여성 1263만명이 갱년기 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기준, 여성 갱년기질환자는 240만명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른 우리나라 60세 이상 여성 648만명 중 37%



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원이 의원은 “갈수록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전과 달리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여성 갱년기 질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노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 갱년기질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정확한 분석, 정부 부처와 지자체간 보건 지원정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재 “열차내 성범죄 예방, 특단의 대책 필요”

철도 관련 시설과 열차에서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촬영 등 성범죄의 증가 비율이 크게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14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 범죄는 2015년 1491건에서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 2019년 2459건, 2020년 176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413건이던 성범죄는 2019년에 936건으로 증가했다.

김희재 의원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검사장, 국민이 바라는 檢 개혁 앞장서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무 미수에 대한 질타 대신, 호소와 당부가 이어지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대진고검·광주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개혁 요구에 물리고 있는 검찰의 현 상황을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드는 데 검사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소 의원은 “70년동안 유지되어왔던 수사 구조가 이 시기에 대폭 바뀌고 있다”



며 “여러분들은 이제 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온데 대해서) 인젠가 검찰을 그만두고 이 시대의 검찰을 되돌아 생각할 때 후

배들에게 광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 의원은 검찰총장 후보에 3회 올랐고, 퇴임 후 ‘전관예우’를 포기하고 농협대와 순천대에서 인제 양성을 했다.

강은미 “수질총량관리센터 독립성 보장안 마련 시급”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은 14일 “물환경보전법과 4대강 수계법에 근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총량관리센터가 환경부장관 훈령에 유지되고 있어 법령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된 수질총량관리센터는 현재 석박사급 전문위원 38명이 각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하천 목표수질에 부합하도록 허용총량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수질총량관리센터의 고유업무는 있으나 조직편제가 불확실하여 소속 전문위



원들이 2018년에 노조를 결성하고 조직발전 공론화를 추진해왔다.

강은미 의원은 “수질총량관리센터 전문위원의 임명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있는데도 각 유역청이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는 월권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수질총량관리센터의 고유업무가 더이상 흔들리지 않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